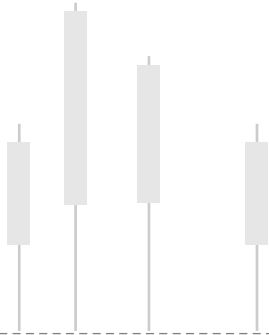


2006년 한국경제 전망



박상원 / 본지 발행인
경제학박사 / CBS 객원해설위원

경제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야구에서 타율을 맞추는 것만큼 어려운 과제이다. 야구에서 3할의 타율을 치는 타자를 훌륭한 타자로 여기는 것도 그만큼 경제를 전망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지난해에 한국정책당국자들이 내년 한국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와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우선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위축,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의 임금

하락 압력 등 가계의 주 수입원인 임금에 대한 우려가 첫번째 이유이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세금, 연금 등의 부담이 커졌고 가계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라 내년에는 가계소비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2006년도 한국 경제를 각 부문별로 전망해 볼까한다.

첫째, 경제 성장에 관하여 설명하자면 2006년 국내경제는 2005년의 3.7%보다 1%포인트

높은 4.7%의 실질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계의 부채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장기간 침체되었던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민간소비의 회복이 설비투자를 자극하여 설비투자의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경기선행지수가 경기회복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세를 볼 때 2006년에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출하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재고는 감소하고 있는 점이 제조업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수출과 생산에 큰 몫을 차지하는 정보통신업종의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전자업종과 정보통신업종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IT산업에서도 출하 증가 및 재고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경기의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완만하지만 둔화세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위안화를 절상하는 등 긴축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원인은 일자리 창출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형 서비스업종(자영업종)이 여전히 과잉고용 상태에 있다. 따라서 생활형 서비스업종의 고용조정이 전체 서비스업종의 고용상황의 개선을 더디게 할 것이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고용의 내용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수요부문별 전망은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2005년 2.8%에서 2006년에는 4.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중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가계부채의 조정이 진전되면서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가계의 부채조정이 민간소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던 판매신용이 2004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섬으로써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06년에는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내수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고용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비자평가지수 등 소비관련 선행지수가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나 추세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제약 완화, 고용여건 호전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탄력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고 있으나 중하위소득계층의 부채부담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하위소득계층이 주로 이용

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이 중하위소득계층의 부채부담을 시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이 2005년 상반기에 5.50을 기록하여 2003년 5.22, 2004년 5.41에 비해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높고, 고소득층은 해외소비를 선호하여 소비수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소비에 부정적 요인이다. 또한 부동산종합대책(8.31 발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 보유세율의 인상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경기가 하강하면 건설부문 고

용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2006년 설비투자는 2005년 대비 5.8% 증가하여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설비투자는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높아져 설비투자 회복에 민간소비 회복이 긴요한데, 2006년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이들 기업의 투자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에는 IT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도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부 세계적인 국내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위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희설비가 증가하고 설비투자압력이 크지 않으며,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투자는 증가할 것이나 민간부문 투자

가 감소하여 1.2%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시장이 투기적 수요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동안 주택건설경기에 투기적 수요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요의 감소는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며, 실제로 최근 건설경기를 선행하는 건축허가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10.29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던 2003년 하반기에도 민간부문의 건설수주가 뚜렷이 감소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기성액의 둔화로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위축을 상쇄하기 위하여 BTL을 비롯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건설투자의 부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6년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미국과 중국의 성

장둔화에 따라 2005년(12.6%)에 비해 다소 낮은 10.8%(통관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2006년 세계경제가 4.3% 성장하여 건조한 성장추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힘있어 반도체 매출은 물론 반도체단가와 BB율이 반등하고 있으며, 일본의 IT장비 수주도 저점을 통과하는 등 세계 IT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005년 3.5%에서 2006년 3.3%, 중국이 9.0%에서 8.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내수회복, 국제적인 고유가로 인한 원유수입액 증가에 따라 수출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11.7%(통관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물가와 고용에 관하여서는 2006년 소비자물가는 내수경기 회복,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05년(2.9%) 보다 다소 높은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유가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하였으나 2006년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율이 2005년(연평균 10.7% 하락 예상)보다 매우 낮은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수입물가 상승압력을 흡수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2005년 중 0.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 GDP디플레이터도 2006년에는 2.4%로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중 실업률은 2005년(3.8%) 보다 다소 낮은 3.7%, 취업자수 증가율은 2005년(1.5%) 보다 다소 높은 1.9%로 예상된다. 고용시장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내수업종과 서비스업종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과거 경기회복국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제조업과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생활형 서비스업종의 고용조정, 건설경기 둔화 때문이다.

위와같이 각 부문별 전망을 해보았다. 정책당국자들이 주장하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지만 확신을 가질만한 수준이 아닌만큼 정부는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6년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에 더욱 더 경제에 신경을 써서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